

퇴직급여제도 개편, 어디에 초점을 두어야 할까?*

길 현 종**

사전적 의미로 퇴직급여는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 전체를 포괄하는 용어이다. 해당 정의를 따른다면, 퇴직급여제도는 퇴직자에게 지급하는 급여와 관련된 한 사회의 규범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서 규율하고 있다. 담당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본 제도를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할 목적으로 설정한 제도로 정의하고 있다.

정의에서 드러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퇴직급여제도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라는 점이다. 즉,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에게 제도 설정 의무를 부과하는 법정 강제 제도이다. 국가별로 상황이 달라 절대적 비교에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지만, 우리나라 제도는 직업 기반 연금제도가 임의 제도인 캐나다, 강제적인 직업 기반 연금 제도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으로 기여하는 프랑스 등과는 명확하게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법률로 정한 퇴직급여제도는 총 5종이 존재한다. 이 5종은 바로 퇴직금제도,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특례이다. 이들 제도를 급여 수령 방식을 기준으로 구분해 보면 퇴직 시 일시금으로 수령하는 퇴직금제도와 연금 또는 일시금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퇴직금 이외의 네 개의 제도로 구분할 수 있다. 제도의 도입 시기를 기준으로 보아도 퇴직금제도가 가장 먼저 도입되었으며, 다른 연금 수령 가능 제도는 그 이후에 도입된 제도이다.

흥미롭게도 그리고 한편으로는 안타깝게도, 이 퇴직급여제도는 무관심 속에 가려진 마치 그림자 같은 제도였다. 오랫동안 연금제도 개혁 논의가 있어 왔지만, 퇴직급여제도는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금에 가려져 왔다. 수십 년의 퇴직급여제도 변화에서 국민연금 퇴직금 전환금 제도 도입과 같은 극소수의 관련 논의만이 존재할 뿐이었다.

*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hyeonjongkil@kli.re.kr).

노사 양측의 관심도에서도 퇴직급여제도는 무심하게 방치된 제도였다. 핵심 유관 주체임에도 노동계와 경영계가 포함된 사회적 대화가 활발했거나, 이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흔적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오랫동안 퇴직급여제도가 임금 성격을 갖고 있다고 이야기되었음에도, 노사는 다른 임금만큼 퇴직급여제도에 관심을 두지 않았던 것이다.

연구자들에게도 퇴직급여제도는 깊숙이 숨겨진 제도였다. 근로생애 수십 년을 관통하는 복잡 다단한 제도임에도 관련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졌다. 어떤 퇴직급여제도를 선택할지에 대한 논의 이외에 다른 논점에 관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정리하자면 퇴직급여제도는 정책적으로, 노사 양측에서도, 본원을 포함한 연구 영역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사회제도였다.

하지만 퇴직급여제도는 더 이상 이처럼 대우받지 말아야 한다. 제도 자체의 중요성을 논외로 하더라도, 최근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와 이에 따른 퇴직급여제도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를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본원에서 오랜만에 퇴직급여제도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본 연구는 정책 연구 관점에서 퇴직급여제도에 주목하여 본 제도를 양지 혹은 본무대로 당겨오기 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었다.

이를 위한 첫 단추로, 이번 호 노동리뷰에서는 다양한 양적 자료를 확보하고 탐색하여 본 제도와 관련된 새로운 정보를 제시한 세 가지 연구를 소개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첫 번째 연구에서는 행정 DB, 두 번째 연구에서는 패널자료, 세 번째 연구에서는 자체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본 제도와 관련해 잘 알려지지 않은 실태나 현황을 추가로 보여주고자 했다.

이 연구를 살펴볼 독자들에게는 다음의 논점에 초점을 맞추길 추천해 드린다. 첫째, 퇴직급여제도의 두 가지 기능과 관련한 부분이다. 비록 최근 논의가 퇴직급여제도의 노후보장 기능에 방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실 본 제도는 이 기능 이외에 노후로 가기 위해 현재의 삶의 소득을 보장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앞서와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 마치 한편에 숨겨져 있는 그림자처럼, 퇴직급여제도는 노후 이전에 우리 하루하루의 삶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이다. 본 호의 세 편의 연구 중 특히 두 번째, 세 번째 연구는 이러한 양면적 기능과 실태를 좀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둘째, 이러한 상황에서 퇴직급여제도가 노후 보장을 위한 제도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에 초점을 두어야 하는지와 관련한 부분이다. 물론 다양한 논점이 있겠지만, 세 연구는 특히 격차가 중요한 논점임을 보여준다. 좀 더 단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마치 노동시장 이중구조처럼, 퇴직급여제도에도 이중구조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것이다. 신속하게 우리가 꿈꾸는 다층 노후보장제도로 이행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층부에 있는 근로취약계층이 이를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렵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세 연구는 드러내고 있다. 정리하자면, 퇴직연금제도의 이중적 기능, 즉 노후에 소득을 보장하는 기능과 노후로 가기 위해 소득을 보장하

는 기능이 함께 존재하는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연금화라는 수단을 통해 노후보장제도로서의 변화로 천천히 나아가기 위해 가장 먼저 우리가 고려해야 할 대상은 퇴직급여제도 이중구조 체계 아랫단에 있는, 어쩌면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아랫단에 있다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노동시장의 취약계층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KLI**